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공방

글 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요즘, 출판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양보 카드설'이 지배적인 가운데, 만약 20년 연장이 결정될 경우 미국 저작물뿐 아니라 국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보호기간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국내법 개정 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역협정이라는 주고받기 메뉴의 하나로, 그것도 지극히 우려할 만한 비교열위 속에서 저작권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쟁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20년 연장 찬반 주장의 격돌

일본문예가협회, 일본만화가협회,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16개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창작자단체협의회는 2006년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에서 70년까지로 20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당일 이 단체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요망서를 문화청에 제출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국제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법제화시켜 정부가 표방하는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창작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중립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모임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회의'는 2006년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권리자 단체의 일방적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여건이 반영되도록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 역시 문화청에 요망서를 제출하는 한편, 여론 확산과 공개 토론의 장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http://thinkcopyright.org>)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구미 제국이 1990년대에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 연장시켰고, 특히 미국이 주요 저작권 고객인 일본에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한다. 구미에서는 주요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결될 만하면 연장이 반복되었던 경위가 있어, 앞으로도 보호기간 연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저작권 처리가 복잡해지고 침해를 둘러싼 논쟁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보호기간 종결에 따른 새로운 번역 붐, 방송·통신 융합 환경 등 다양한 환경 변화 과정에서 중차대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득권 성격이 강한 저작권은 일단 연장되면 축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문화적·경제적 영향 등 다면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 측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저작자, 사업자,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각 분야 연구자, 법률가 등이 참여해 12월 11일 제1회 심포지엄 및 올해 3월 12일의 <왜 지금 기간 연장인가> 포럼에 이어, 4월 12일에는 <지식의 창조와 공유 입장에서 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 포럼을 연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신중하게 대처하자고 표명하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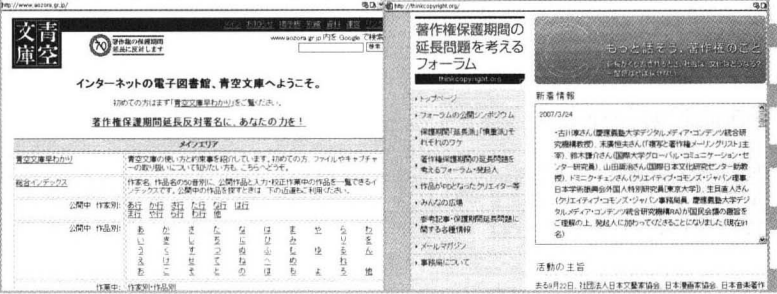
찬반 주장의 쟁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게 4가지 쟁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저작자 보호 및 '창조 사이클' 문제이다.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높인다는 찬성 의견에 대해, 이미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마당에 더 연장한다면 창작욕이 증진되지는 않는다고 반대론은 맞선다. 작가가 사후보다는 생존 시의 지원이 바람직하며, 작품을 오래 남기려 한다면 오히려 유통을 가로 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회의 운영 사이트 및 심포지엄 장면



저자사 후 70년 보호(연장)를 반대한다는 표시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전자도서관 '이오조라(靑空문고)' 홈페이지(http://www.aozora.gr.jp)



반론이다. 작가가 창작과 가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의 보호기간으로 70년은 오히려 짧으며 작가의 생각은 영원히 존중받아야 한다(찬성론)는 의견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왜 작가의 유족들만이 불로소득을 얻어야 하는가, 또 작가의 유족들이 권리 수입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미지로 말하는가(반대론)라는 주장이 맞는다. 작가에 대한 경애의 뜻을 반영하는 적정 보호기간이 필요하며 작가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사후 50년 동안 처자식이 생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찬성론) ↔ 보호기간 연장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은 주로 저작자의 손자와 증손자, 일부 단체이며 저작권 사용료 지불과 작품에 대한 경애를 연결 짓는 것은 이상하다, 유족 등 일부의 이익에 비해 사회 전체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반대론). '저작권의 과잉보호가 새로운 창조를 저해한다'는 주장은 예술에 대한 몰이해다(찬성론) ↔ 요즘 시대는 누구나 저작자이자 이용자인데 보호기간 연장을 거듭해 독점이 장기화될수록 창작에 저해가 되며 국제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반대론). '창작 사이클'이란 고전에 해당하며 근현대 작품의 개작이나 패러디는 작품에 대한 굴욕이다(찬성론) ↔ 사후 50년 이상 된 작품은 이미 고전이며 구로자와 아키라가 아쿠다가와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원작에 대한 굴욕인가(반대론).

둘째는 '글로벌 스탠더드' 논쟁이다. '저자사 후 70년' 보호가 세계 표준이므로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이 50년인 것은 불공정하며 상대국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유산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구미 제국과 동일한 기간이 적용돼야 한다(찬성론) ↔ 사후 70년으로 연장한 것은 베른협약 가맹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미국 자신도 (옛 작품은 공표시 기산하므로) 진정한 사후 70년 국가가 아니고, 영국에서 저작권접권 연장을 단념한 사례와 같이 기간 연장이 세계 조류는 아니다(반대론). 선진국 대비 권리 보호기간이 짧은 것은 부끄러우며 야만적인 나라로

오해받지 않고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구미 제국처럼 연장이 필요하다(찬성론) ↔ 구미 제국은 과거 작품의 수출이 많아 연장하려는 것뿐이며 기간 연장을 반복하는 것은 일본과 세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반대론). 국제적인 조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콘텐츠의 국제유통에 저해된다(찬성론) ↔ 조화를 깨는 것은 오히려 구미 제국이며 현재 구미 제국 사이에서도 보호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나 유통에 지장이 있는가(반대론).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므로 손자가 살아 있을 저작자 사후 70년 정도까지는 보호해야 한다(찬성론) ↔ 수명이 길어지면 생전 보호기간도 길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정도로 충분하며 왜 '손자가 죽을 때까지'를 주장하는가(반대론). 미국이 주장하므로 결국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찬성론) ↔ 보호기간 연장의 의무는 없으며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기간 연장에 필요한 데이터나 시물레이션이 전혀 없다(반대론).

이외에도 흥미진진한 논점인 '저작물 이용 촉진', '국제수지' 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생략한다(상세한 사항은 위 사이트 참조).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명망 높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명확한 반대 의견서(2006. 12. 22)를 문화청에 제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보호기간 연장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며, 만약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와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도 및 현실적 준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파만파 번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일본 문화계와 지식사회의 논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인데, '실질적 논쟁이 무시되고 생략된'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결코 작지 않다. **한글**